



워싱턴통상정보

2025.02.27

美 싱크탱크의 트럼프 관세의 위험성 지적 및 정책 제언

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워싱턴지부

※ 이하 시간 표기는 미국 현지시간(EST)

I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과 트럼프 관세의 유사성 및 위험성 (CFR, 2/24)

□ (CFR*)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전통적인 수입대체 산업화(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, 이하 ISI) 정책의 접근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짐

* 美 외교협회(Council on Foreign Relations)

○ (정책목표) ISI 정책은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의 도입과 함께 정부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여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·육성하는 것이 목표

- 강한 통화 정책과 결합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수입 중간재 및 자본재 가격 안정화를 시도하기도 함

○ (정책적 한계) 하지만 ISI 정책은 구조적으로 △산업 간 불균형 발전, △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치적 부담, △산업지원을 위한 대규모 부채발행으로 국가 재정 위험 확대로 이어짐

- (사례①) 18세기 후반 Alexander Hamilton 초대 재무장관이 주장해 도입된 신생 제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세 부과가 美 역사상 최초의 ISI 정책으로 여겨짐

· 당시 관세 정책은 수입 제한보다 세수 확보 목적이 컸으나, 관세 수준과 산업 보조금의 효과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면서 북부(산업 중심)와 남부(농업 중심) 간 갈등이 심화

· 일부 역사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남북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분석

* 제조업 보호 정책은 농업 부문의 비용 증가와 영국산 고품질 제조품의 수입 감소를 초래했으며, 이에 따라 제조업은 영국산에 의존하고 미국을 농업중심경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세력의 정치적 반대에 부딪힘

- (사례②) 20세기 중반, 남미 신흥 경제국들은 선진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ISI 정책을 도입

· 1960년대 대규모 차입을 통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으나,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1980년대 다수 국가가 국가부도에 직면, 국제 금융 위기가 촉발됨

□ ISI 원리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높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며,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

- 미국 경제가 저렴한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, 현행 관세 정책은 소비자와 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
- 또한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,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옴
 - 2022년 8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CHIPS 법안 역시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 내부에서 보조금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
- 산업 지원은 차입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
 - 과거 남미 사례에서도 과도한 차입이 경제 불안정을 초래
 - 미국 경제는 남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,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 장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- 현재 미국과 같은 규모와 지위를 지닌 경제 대국이 ISI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전례가 없음
 - 결국 ISI 정책과 유사한 접근 방식은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

II

무역적자 개선보다 내실 있는 경제성장 전략 중요 (AEI, 2/21 및 PIIIE 2/24)

□ (AEI*)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 개선보다 내실 있는 경제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

* 미국 기업연구소(American Enterprise Institute)

- 무역적자는 해외 자본 유입과 미국 경제 성장의 결과물로,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음
 -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**단기적**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
 - 하지만 **장기적**으로는 고용 창출, 기술혁신, 생산성 향상을 통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됨
- 무역적자와 자본 흑자는 상호보완적이며, 무역수지는 경제성장의 단일 척도가 아님
 -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경제 성장의 본질적 동력이 훼손될 위험이 있음
 - 통상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, 장기적 경제 성장 전략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
 -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, 감세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
- 따라서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이 아닌, 장기적 성장 전략과 미래 투자, 기술 혁신·인재 육성, FDI 유치 등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함을 제언
 - (미래 경제 환경 대응)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장기적 성장 전략 수립 및 미래지향적 투자 유치에 집중
 - (기술혁신 및 인재 육성)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대
 - (FDI 유치와 기술혁신 시너지 효과 극대화) 외국인 직접투자(FDI) 유치와 기술 혁신을 결합하여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강화

□ (PIIE*) 관세 정책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지만, 장기적으로 기업 혁신을 저해하여 가계 생활 수준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음

*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(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)

- 외부 경쟁 압력이 줄어들수록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동기가 약화되어, 경제 성장 둔화 및 노동시장 정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
- 기업 혁신 둔화와 생산성 감소는 ① 임금 정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, ②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증가, ③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참고 자료

2.24(월) PIIE, Why higher tariffs won't shrink the trade deficit

2.24(월) CFR,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rump's Economic Policies

2.21(금) AEI, Trump's Myth of the Trade Deficit